

chosun.com

☞ 프린트 ☞ 닫기

주용중 기자 midway@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입력 : 2009.04.10 03:20 / 수정 : 2009.04.10 06:1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9/04/10/2009041000109.html

"내달 남해안 선벨트사업 등 발표"



▲ 최상철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9일 인터뷰에서 "지역 개발문제가 지역(분할) 정치구도로 인해 왜곡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정경열기자 krchung@chosun.com

최상철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본지와 인터뷰

이달말 5개부처 보고대회

지역발전 예산 100조 중 수도권엔 1조도 안들어가

최상철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9일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이달 초 통과됨으로써 본격적인 지역 발전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면서 "5~6월 중 남해안 선벨트 사업을 포함한 4개 초광역권 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을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1200만명이 사는 남해안은 좋은 항만과 기간산업들을 갖고 있어 물류의 중심이 될 수 있다"면서 "수도권에 대한 대극(對極) 개발을 통해 제2수도권으로 만들겠다"고 했다. 그는 "특히 남중권(사천 남해 진주 여수 광양 순천 고흥 등 경남 서부와 전남 동부지역)이 개발의 핵심"이라고 했다.

최 위원장은 또 "이달 말 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균형발전위, 녹색성장위, 국가건축위 등 3개 위원회와 국토해양부 등 5개 부처가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위한 합동 보고대회를 열 계획"이라며 "4대강 사업의 청사진을 집대성해 발표하는 행사"라고 했다. 그는 "4대강과 닮아 있는 시·군 44곳에 대한 개발 계획을 짜고 있다"면서 "4대강 사업이 2011년 완료되면 일자리 19만개가 창출되고 23조원의 경제적 효과를 보게 된다"고 했다.

그는 수도권 규제 합리화를 둘러싸고 수도권과 지방이 대결 양상을 보여 왔던 데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시했다. "이명박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국토 개발정책은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잘사는 곳(수도권)에서 기업과 부처, 공공기관 등을 빼내 못사는 곳(지방)으로 옮겨주자는 것이지만, 이명박 정부는 잘사는 곳은 그대로 놔두고 못사는 곳은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명박 정부 임기 동안의 지역 발전 예산 100조원 중 수도권엔 1조도 들어가지 않는다. 한마디로 수도권은 도와주지 않는다. 수도권을 개발하면 생기는 이익을 지방으로 환원해주는 방안, 일부 국세를 지방세로 넘겨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그러나 "수도권이 (공부 잘한다고) 공부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지 않느냐"면서 "(수도권을) 묶어둔 규제는 풀어줘야 하고, 작년에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상당 부분 풀어준 것"이라고 했다.

최 위원장은 지역간 균형을 잡기 어려운 또 다른 고민도 털어놓았다. "국회에서 자꾸 지역적인 정치구도와 연관해서 지역 발전정책을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듭니다. 호남권은 민주당, 충청권은 자유선진당, 영남권은 한나라당으로 나뉘어 있지 않습니까. 또 선거를 앞두고 선명성 경쟁을 합니다. 표와 연관돼서 요구를 봇물처럼 하는데 균형을 잡기 힘들죠. 국토 발전은 지역 정치를 떠나서 생각해야 하는데..."

그는 "지금 지방은 '마음의 병'에 걸려 있다. 지방과 지방도 담을 쌓고 있다"면서 "도로 건설 등

하드웨어적인 개발도 중요하지만 지방의 자존심을 살려주고 상대적 박탈감을 없애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적 접근이 절실하다"고 했다. 그는 도산 안창호 선생의 강산개조론을 자주 외는 이 대통령에 대해 "근본적인 국토 개조사업을 해야 할 것 아니냐는 말을 자주 한다. 지역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이라는 열정을 갖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서울시장 때부터 도시 개발 등에 대한 조언을 해왔다.

그는 정부와 국회가 행정구역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해 "세금으로 공무원 봉급도 못 주는 시·군이 절반이 넘는다. 이래서야 어떻게 자치를 하고 개발을 하느냐"면서 "행정구역은 장기적으로 개편돼야 하고 그에 따라 기초생활권 등 지역발전 전략은 수정 보완돼야 한다"고 했다.

☞ 프린트 ☒ 닫기

Copyright (c) 2009 chosun.com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chosun.com for more information.